

전두환, 합천 귀향 후 체포...윤석열 “끝까지 싸울 것” 총돌 우려

공수처 “법집행 예의 지킬테니 응하길 바란다”는 메시지 거부 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응해...“집행 거부 전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무시하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2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나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 중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같은 날 오전 언론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 측에 전했다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원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호처나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을 지원하러나

은 경찰 공무원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는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도 문제 제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는 형소법 규정을 들어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전달 판사에게 형소법의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어 “불법 무효”라며 해당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해당 문구는 법적으로 당연한 것을 영장에서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일 뿐, 판사가 월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소법 110·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체포 대상 피의자의 수색을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 판사)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 자체가 처음이지만,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볼 경우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는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것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만 지적이 나온다.

앞서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구속된 바 있다. 이들 모두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행에는 응했다.

한편 내란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의 경우 검찰의

출석요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귀향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자 순순히 집 밖으로 나와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고 수사관

2명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나와 승용차에 태웠다. 당시 검찰은 마찰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 직원들과 경찰 1000여명을 동원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공수처, 과천청사 통제 강화...尹 체포·조사 대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조사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출입 통제 강화에 나섰다.

공수처는 2일 기자들에게 “3일부터는 전날 대변인실이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인원만 출입 조치하기로 했다”며 “출입을 원할 경우 전날 양식에 따라 신청해달라”고 공지했다.

공수처는 “선별 출입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현재 사정상 어려운 관계로 전날 등록에 대해서만 당일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과천청사 관리소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부터 건물 주변 주차 제한 등을 시행했는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경호 차원에서 주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의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장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출입 통제 방식을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 당일뿐 아니라 이튿날에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고,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 허가로 연장하는 수순을 밟는다.

통상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사 수사가 이뤄질 경우 질서 유지와 경호, 수사 보안 등의 차원에서 출입 통제가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다면 조사 이외의 시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원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연합뉴스

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작년)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대한 준항고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존 체포·수색영장 발부 결정이 형소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라는 형태만 놓고 보면 현행 형소법상 명확히 규정된 방법은 아닌 형태다.

현행 법률상 이의신청은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아닌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이다. 민사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관해서는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발부된 경우에는 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다만 이번 이의신청의 취지상 서울서부지법의 상급법원인 고법이나 여타 법원 내지 서부지법 내 다른 판사나 합의부가 아닌 애초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은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

민주,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국회 비상대기령’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모르고,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과 극우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의 메시지 전달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의원들도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선 “극우 세력 동원령이며, ‘극우 세력이여 대동단결하라, 그리고 나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날 집행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거나,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무안 공황에서 자원봉사 하는 의원들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참석을 요망한다”고 공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인문사회	신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